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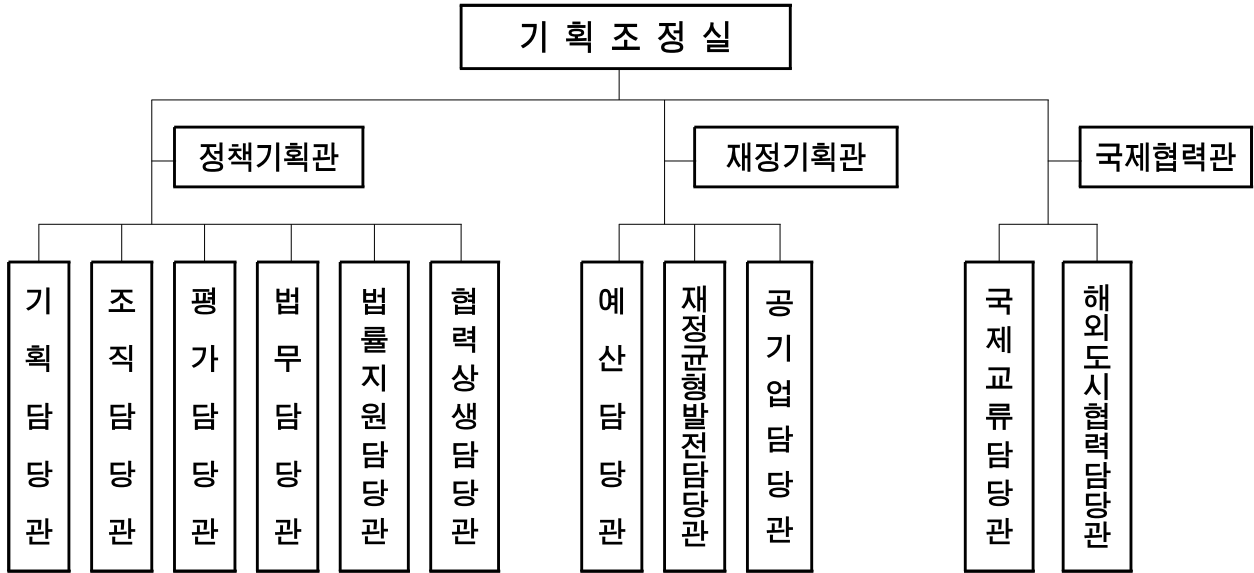
주요 업무 보고

2020. 9.

기획조정실

I. 일반 현황

조 직 1실, 3관, 11담당관, 51팀, 1직속기관 · 1출연기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8대학 10대학원 6처)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8실 2센터)

인 력 307/295명(정원/현원)

(’20. 8. 28.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관리운영직
계	307/295 (178)	257 / 249	42 / 38	1 / 1	7 / 7
기 획 담 당 관	39/42 (19)	31 / 34	6 / 6		2 / 2
조 직 담 당 관	35/33 (20)	34 / 33	/		1 /
평 가 담 당 관	33/29 (19)	31 / 28	1 / 1		1 /
법 무 담 당 관	26/25 (17)	23 / 22	2 / 2		1 / 1
법률지원담당관	29/29 (23)	14 / 13	15 / 15		/ 1
협력상생담당관	17/15 (7)	14 / 14	3 / 1		/
예 산 담 당 관	40/39 (20)	38 / 37	1 / 1		1 /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5/24 (14)	24 / 23	1 / 1		
공 기 업 담 당 관	21/20 (10)	19 / 18	2 / 2		
국 제 교 류 담 당 관	26/24 (17)	16 / 15	8 / 7	1 / 1	1 / 1
해외도시협력담당관	16/15 (12)	13 / 12	3 / 2		1

※ 괄호 안은 부서별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현안사항 기획·조정 ○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총괄, 공약총괄 관리 등 ○ 코로나19 서울시 종합대응 총괄
조 직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업무 ○ 지방분권 업무 및 학술용역심의
평 가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주요사업·시책 평가 및 협업 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 ○ 코로나19 대책 모니터링(부통제관)
법 무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납세자 보호업무 ○ 자치법규 입안심사 및 정비,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소송 수행, 법률자문, 계약서, 위·수탁 협약서 심사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및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협력상생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생 프로젝트 추진, 타 지자체와의 상생교류 협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지자체 등 협력관련 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 코로나19 관련 시책 재원 마련 등
재 정 균 형 발 전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균형발전 총괄,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총괄 등
공 기 업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경영평가, 재정모니터링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국제교류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외교 계획 수립, 국제교류 업무 총괄 조정 ○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협력 및 국제의전 지원 ○ 코로나19 관련 국제 도시간 교류·협력
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정책 해외공유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 국제기구 유치·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등

예산 총 규모 : 2조 9,123억원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최종(사업수)	2020년(사업수)	증감
합계	3,654,786 (80)	2,912,334 (76)	-742,452
일반회계	1,247,406 (59)	984,549 (58)	-262,857
특별회계	93,546 (-)	6,511 (-)	-87,035
기금	2,313,834 (21)	1,921,274 (18)	-392,560

○ 일반회계 : 총 9,845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최종(사업수)	2020년(사업수)	증감
합계	1,247,406 (59)	984,549 (58)	-262,857
기획담당관	1,152 (3)	1,090 (2)	-62
조직담당관	87,315 (11)	102,061 (12)	14,746
평가담당관	1,948 (5)	2,424 (5)	476
법무담당관	778 (3)	723 (3)	-55
법률지원담당관	5,732 (2)	6,099 (2)	367
협력상생담당관	3,386 (3)	3,976 (3)	590
예산담당관	289,587 (3)	279,221 (3)	-10,366
재정균형발전담당관	844,837 (11)	576,934 (10)	-267,903
공기업담당관	814 (4)	895 (4)	81
국제교류담당관	5,995 (7)	5,646 (7)	-349
해외도시협력담당관	5,862 (7)	5,480 (7)	-382

○ 특별회계 : 총 65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최종(사업수)	2020년(사업수)	증감
예산담당관	93,546 (-)	6,511 (-)	-87,035

○ 기금 : 총 1조 9,212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최종(사업수)	2020년 계획(사업수)	증감
합계	2,313,834 (21)	1,921,274 (18)	-392,560
재정투융자기금	1,050,470 (-)	1,116,543 (-)	66,073
감채기금	1,248,062 (-)	788,314 (-)	-459,748
대외협력기금	14,231 (21)	15,242 (18)	1,011
지역개발기금	1,071 (-)	1,175 (-)	104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II. 정책 목표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민선 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지원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

Ⅲ.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

- ①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현황
- ② 현안 조정역할 강화로 권한대행체제 안정적 시정운영
- ③ 자치경찰제 입법 동향 및 서울시 대응방안
- ④ 지방분권 자율화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동향 및 대응방안
- 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개선
- ⑥ 체계적 정부합동평가 대비로 시민만족도 제고
- ⑦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

2.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 ①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제도개선 추진
- ②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
- ③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 ④ 공익변호사단 활동으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3.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① 시정 성인지적 관점 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제 운영
- ② 투자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관리
- ③ 실질적 2단계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 대응
- ④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 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
- ⑥ '20년('19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 ⑦ 市 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의무화 및 선정절차 마련

4.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

- ① 지자체 협력을 통한 코로나 등 대응력 강화
- ② 서울-지역간 우호교류 협력 체계 강화
- ③ 서울-지방간 정책교류를 위한 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 ④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및 운영
- ⑤ 민간 비영리단체를 통한 아시아 개도국도시 공적개발원조 추진
- ⑥ 도시 간 교류협력 다양화를 통한 市 글로벌 리더십 강화
- ⑦ 서울시 우수정책 연계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 ⑧ 국제기구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 ⑨ 서울-과야칼시 스마트시티 협력 MOU체결·웨비나 개최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

①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현황

② 현안 조정역할 강화로 권한대행체제 안정적 시정운영

③ 자치경찰제 입법동향 및 서울시 대응방안

④ 지방분권 자율화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동향 및 대응방안

⑤ 공무원 직무발령 보상제도 운영 개선

⑥ 체계적 정부합동평가 대비로 시민만족도 제고

⑦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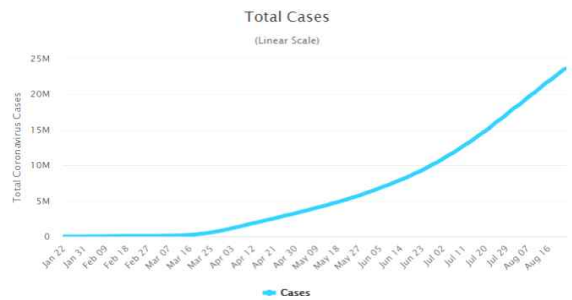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현황

전 세계에서 대유행(Pandemic) 중인 코로나19에 대한 서울 내 확산 방지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 대응현황 보고

□ 발생 현황

○ (전세계) 8. 26. 0시 현재(한국시간), 23,751,919명 확진, 815,797명 사망

- 코로나19 발원지 중국에서의 확산세는 2월 중순을 기점으로 둔화되었으나, 2월말 한국,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환자 급증하면서 WHO 팬데믹 선언(3.11)



〈코로나19 전세계 확진자 추이〉

- 팬데믹 선언 이후에도 미주, 유럽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확진환자와 사망자 증가추세 지속

○ (국 내) 1.20. 첫 확진환자 이후 해외 유입 등에 의해 소규모로 확산되다

- 2월말~3월, 일부 집단(교회, 병원 등)감염이 이어지며 확진자가 급증, 5월 이후 집단감염 사례(이태원 클럽, 물류센터 등) 발생 이후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

○ (서울시) 최근 광복절 전후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으로 서울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는 등 위기상황 발생

*(8.13) 32명 → (8.14) 74명 → (8.15) 146명 → (8.16) 90명 → (8.17) 132명 → (8.18) 151명 → (8.19) 135명 → (8.20) 126명 → (8.21) 128명 → (8.22) 140명 → (8.23) 97명 → (8.24) 134명 → (8.25) 112명

□ 우리시 대응 방향

-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 및 선제적 강화
- (집단감염 대응) 클러스터별 명단 확보, 검사 명령 등 상황별 대응
- (역량강화) 선별진료소 및 검사, 중증·경증 치료 등 市 대응역량 강화

□ 분야별 조치 현황

① 행정명령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 및 선제적 강화

- (시행)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요건을 넘으면서, 8. 16.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2단계 시행 개시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 및 방역망 통제력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모임·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주요내용) 시민 불편에도 불구하고 **집합·모임·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등을 비롯한 2단계 조치 전면 시행으로 방역위기 적극 대응**

- (집합·모임·행사 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집합금지 행정명령)

⇒ (강화) 신고된 집회 개최 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로 집회 통한 감염 차단
(2020. 8. 21.(금) 0시 ~ 8. 30.(일) 24시)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시설 집합금지 및 이외 위험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집합제한) 시행

〈집합금지명령 적용 시설 12종〉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방역수칙준수(집합제한)명령 적용 시설 12종〉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등

⇒ (강화) **집합제한 대상 시설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미준수시 즉시 집합금지, 고발 등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 (공공기관 운영 시설 중단) 공공기관 운영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 단,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취약계층 대상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공공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 마련 및 배포

- ▶ 유연, 재택근무(부서별 1/2 이상 의무화),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4부제 등을 통해 근무 밀집도 완화. 회식금지 점심식사 시 구내식당 및 도시락 이용 권장

○ **(마스크 의무착용) 실내 및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8. 24.~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시)

* 단,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관련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따라 10.13.부터 추진 가능

② 집단감염 발생원인별 철저한 대응을 통해 감염 확산세 저지 노력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발생 현황 >

- (방문자 현황(8.7.~8.13)) 총 4,066명(서울시 1,971, 주소불명 669, 타시도 1,426)
 - 서울시 및 주소불명 검사대상자에 대해 검사독려 중(서울시, 자치구 합동)
 - 주소불명 669명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주소 및 신원 파악 협조요청(8.17)
- (확진자 현황) 서울시 총 544명 확진 ※ 8.26.(수) 0시 기준
 - 검사 총 2,223명 (양성 543, 음성 1,667, 검사중 13) ※ 최초 확진자 제외

< 조치사항 >

- (고발조치)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전광훈 목사, 성명불상자 고발
 - (고발개요) 8.16.(일) 19:25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서울 종로구 소재)
 - (고발사유) 자가격리 위반, 검사명령 미이행 교사 및 방조, 보석조건 위반 등
- (추가 명단확보) 행정조사 통해 8.1.~8.13. 중 방문자 명단 추가확보
 - (조사개요) 8.16.(일) 14:00~15:30 / 문화정책과장 외 5명
 - (조치사항) 검사대상 신속한 전수조사 강조 및 협조요청, 미이행자 강제검사 통보
- (역학조사) 정확한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원본자료 확보를 위한 서울시-중대본 합동조사
 - (조사개요) 8.20.(목) 17:00 ~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 (추진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및 제42조(강제처분) 등
 - (조사반) 총 40명
 - ▶ 서울시(29), 중수본(2), 방대본(2), 서울시경(3), 성북구(2), 경기도(2)
 -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 사유 고발(8. 20. 서울시경)
 - ▶ 고발취지 : 감염병관리법 제18조 위반(역학조사 거부·방해)
 - 신도, 교회방문자, 숙식자 명단 등 확보 및 분석 통해 추가검사 대상자 파악

8.15. 광화문 집회

< 8. 15.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 >

○ (확진자 현황) 서울시 총 46명 확진 ※ 8.26.(수) 0시 기준

– 검사 총 7,628명 (양성 46, 음성 7,470, 검사중 112)

확진일 확진수	8.16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비 고
46	1	1	6	15	8	4	6	2	3	- 집회 참석자: 29 - 집회 통제요원(경찰 등): 6 - 참석자의 접촉자(가족 등): 11

< 조치사항 >

○ (협조요청) 8월 15일 집회신고 한 33개 단체에 코로나19 관련 조치사항 안내

– 집회 참석한 소속 단체원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안내(8.17)

– 집회 참여 단체원의 코로나19 검사 안내 및 인적사항 제출 요청(8.19)

< 광복절 집회 대응 >

▶ 집회 규모 : 일파만파(11,000명), 광화문광장 주변(4,500명), 국투본(3,000명) 등 다수단체 2만여명

※ 집회신고 : 33개 단체 228,240명

▶ 주요 대응 : 집회취소촉구 브리핑(4회)→ 집회금지 통보(취소요청 포함 54회)→ 현장점검 및 채증(82명 근무)

▶ 집회 형태 :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된 2개 단체(3,100명)의 집회장소에서 다른 단체원 및 일반시민들 합류로 대규모(21,000명) 집회로 확대됨

○ (진단검사명령)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인근 체류자까지 코로나 노출 가능성이 있어, 추가 지역사회 집단감염 차단 위해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8.24)

○ (전수조사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화문 집회 인근 체류자 대상 전수조사 실시 및 응답사례별 대응(모니터링, 검사안내 등)

– (검사에정자) 8. 26.까지 실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철저

– (미응답자) 경찰과 협조하여 소재지 파악 및 방문조사 등 전수조사 실시

– (검사거부자) 벌칙규정(감염병예방법 제79조) 등 행정명령 준수 요청 안내 및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 익명검사 도입 등으로 검사율 제고

③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로 검사, 중증·경증 치료 등 총력 대응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 병상 확보 〉

- (공동대응)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20.8.16.~)으로 환자 급증에 대응

〈 병상 현황 〉

(기준:8.25. 20시, 단위:개)

구 분	보유병상		사용 중 병상				입원가능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	중증환자 치료병상*	가동률(%)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합 계	1,705	319	1,280	75.1	227	71.2	425	19
서 울	771	199	630	81.7	126	63.3	141	11
인 천	400	49	140	35.0	40	81.6	260	3
경 기	534	71	510	95.5	61	85.9	24	5

*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사용 병상 수는 코로나 환자만이 아닌 일반 중증환자를 포함한 수치

**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입원가능 병상은 일반 중증환자 입원가능 병상을 제외한 확진자 입원 가능 병상수
(보유병상 - 사용 중 병상 - 확진자 입원가능병상 = 일반 중증환자 입원 가능 병상)

- (추가확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선제적·적극적인 병상 확보 및 효율적 운영
 - (일반병상) 북부병원76병상, 적십자병원94병상(코로나19 전담병원지정추진)
 - ▶ 현 입원환자 이송 후 운영 (9.7경)
 - (중환자병상) 중등도 환자 병실 전환 및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
 - ▶ 상급종합병원 등에 중환자 병상 추가확보 요청(재난의료협의체 운영)
- (민관협력) 병상확보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난의료협의체』 운영
 - (목 적) 인력, 병상 등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 (구 성) 서울대학교 병원장, 재난거점병원장, 중증응급진료장 등 15인 이내
 - (역 할) 대량 환자발생에 따른 필수자원 수요 파악 및 병상, 인력 등 지원

〈 생활치료센터 〉

- (현황) 남산유스호스텔(기준), 태릉선수촌(8.19. 개원), 은평소방학교(8.25. 개원), 등 총 765병상 운영 중으로 확진자 증가에 따라 긴급하게 병상 확보중
- (추가확보) 국립국제교육원, KOICA 연수원 등 8월 말 개원을 통해 추가 병상 확보(466병상) 예정이며 기타 시설에 대해 추가 검토 중

선별진료소

- (운영지원) 기존 자치구 선별진료소 인력 및 시설 확충 등 운영 지원
 - (시설지원) 글로브월형태 검체채취 부스, 냉방시설 등 추가 지원
 - (비용지원) 인건비, 방역물품 등 구매비, 종사인력 격려 위한 비용 지원
- (워킹스루) 지역 순회형 “찾아가는 선별진료소(Walking-Thru)” 운영
 -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자치구 대상 순회형 선별진료소를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

〈 운영 개요 〉

- ▶ (운영기간) 8월말부터 한달 간 ※ 태풍 ‘바비’ 통과 이후 운영 예정
- ▶ (장 소) 검사수요가 급증한 자치구와 협의 후 선정
- ▶ (설치개수) 이동형 검체채취부스(글로브월 형태) 6개
- ▶ (운영방식) 자치구 당 약 3일간 긴급 수요 처리 후 타 자치구로 이동
 - ※ 지역별 검사수요에 따라 6개 부스를 배분하여 여러 자치구 동시 설치·운영 가능

- (드라이브스루) 광역형 “드라이브 스루(Drive-Thru)식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 市 전역에 걸친 검사수요 발생으로 지역단위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경우,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광역형 이동식 선별진료소(DT)’ 설치 예정

〈 운영 개요 〉

- ▶ (운영기간) 시 전역 검사수요 발생 즉시 ~ 필요시
- ▶ (장 소) 차량 이동이 편리하고 방역상 안전성이 높은 위치 중 선정
 - 상황의 엄중성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확충 여부 결정 및 운영

□ 향후 계획

- 코로나19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실·본부·국 총력 대응 : ~ 종식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등 대응단계 격상, 완화 등 대처
- 포스트코로나 대비 시정운영 전략적 계획 마련 및 추진 : 상시

2

현안 조정 역할 강화로 권한대행체제 안정적 시정운영

정책간 조정 및 부서간 협업을 지원하고 긴급현안에 대응하는 시정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으로 안정적 시정운영과 시민생활 안정 도모

□ 추진 방향

- **현안발생시** 긴급회의 소집과 시정자원의 적기 투입으로 **대응체계 구축**
- 주요 정책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부서간 칸막이 해소** 및 소통·협력 지원
- **권한대행 체제 확립**으로 민선7기 시정 완수 및 시민생활 안정 도모

◇ 서울시 권한대행 체제 운영기간 : 272일간

▶ 故 박원순 시장 유고일(7. 10.(금))로부터 보궐선거일(4. 7(수), 24:00)까지

□ 중점 추진내용

- 권한대행 체제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 복지·안전 등 시민생활 보호** 추진
 - 권한대행, 부서장, 실·본부·국장 간 현안 공유로 촘촘한 시민보호 활성화
 - 풍수해 등 재난대비 취약 시설 등 현장방문으로 안전대비책 체감도 제고
 - ※ 신월 저수배류지 등 풍수해 대비시설 및 대규모 공사 현장 안전점검 철저 등
- **긴급한 현안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적시성 있는 상황 전파와 긴급현안 회의소집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조직·예산·인력 등 시정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 시장 유고, 코로나19 확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회의 개최를 통한 적시 대응
- **실·본부·국간 정책 조정**을 통해 주요시책에 대한 **실·본부·국의 협치** 지원
 - 정례·수시 회의체(실·본부·국장회의 등) 운영으로 부서간 소통·협업 유도
 - 소관 불분명 업무는 **총괄 및 협조 등 담당부서 지정**으로 명확한 역할분담
 - ※ 부동산대책, 코로나19 대응 등 시 정책안건에 대한 부서간 역할분담 및 협업

[주요 컨트롤 타워 기능]

긴 급	상 시	중장기
긴급 현안발생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부서간 정책조정으로 시책 적기추진	권한대행 체제 시민생활 근간 보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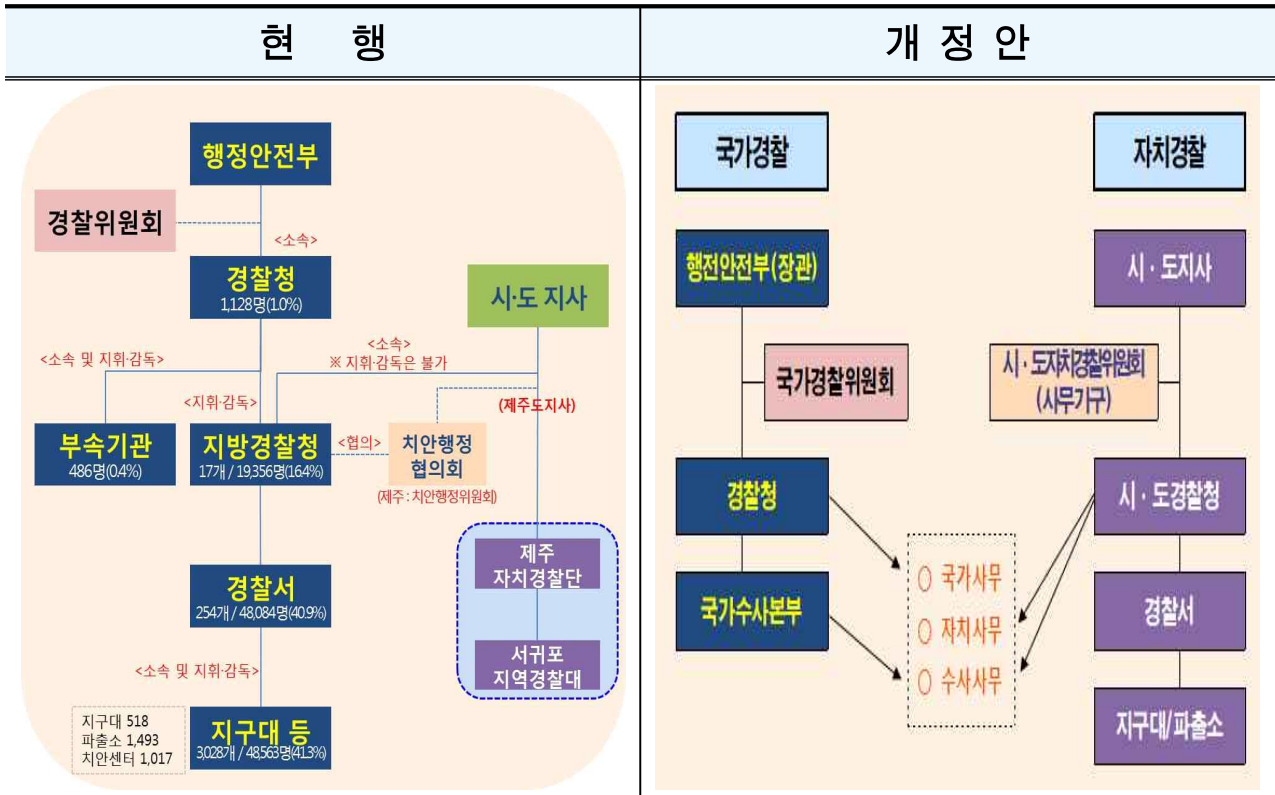
자치경찰제 입법동향 및 서울시 대응방안

제 21대 국회에 자치경찰 관련법안(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이 발의(20.8.4)됨에 따라 정부, 국회 등 협의를 통해 시 입장을 적극 반영 추진

- 발의법안 주요내용**(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 (조 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지방경찰청 시도지사 소속
 - (사 무) 경찰사무를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 및 각 상위관청이 지휘
 - (인 사) 경찰신분은 국가직 유지, 임용권은 대통령·경찰청장에게 부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찰청장 임용권 일부 시·도지사에게 위임
 - (재 정)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비용 국가 지원
 - (시행일) 2021. 1. 1.(금) 시행

- 시 대응방안**
 -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검토
 - 자치경찰제 관련 토론회·세미나 참석,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
 - 발의된 법안상 보완과제를 검토하여 의견제출 및 수정안 제시
 - 자치경찰 사무·인사권, 예산지원, 통제수단, 준비기간 등

- 추진 계획**
 - (법안내용 건의) 자치경찰사무·인사권 및 비용보장, 시의회 감시권 등 건의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자치경찰사무, 인사권한 등에 대한 사전협의 요청
 -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민주적 통제기관인 시의회 감시권 명문화 요청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지원 규모 및 방법제시 요청 등
 - 일선 경찰서 내 자치경찰사무 지휘통제 역할수행, ‘경찰부(副)서장제’ 필요 등
 - (사전 준비사항) 충분한 사전준비기간 요청 및 추진전담조직
 - 성공적 자치경찰 시행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 요청(2021.1월 ⇒ 2021.7월 이후)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기구) 구성, 자치법규 마련, 비용협의 등 추진전담조직 설치



- **조직** : 지방경찰청 이하 소속기관 시·도 소속으로 변경(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시·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처 설치
 - 경찰청 이하 관청은 소속만 시·도로 변경 후 국가/수사/자치경찰 사무 수행
- **인사** : 신분은 국가직 유지, 임용권은 대통령(총경 이상)/경찰청장(경정 이하)
 - 단, 경정 이하 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경찰청장→시·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후 추천, 대통령 임용
- **사무** : 현재의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 사무로 분리
 -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수사경찰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하에 처리하도록 규정
 - *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사무 및 교통/학교·가정·성폭력 등 수사사무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자치경찰사무 관련 시·도경찰청장 직접 지휘·감독
 - 구성(7) : 시·도지사 지명(1) + 시·도의회 추천(2)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2) + 국가경찰위원회 추천(2) ※ 위원장(1)·상임위원(1), 시·도지사 임명
- **재정** : 이관된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비용 국가지원 명시
 - 자치경찰사무 처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지사가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 수립

4 지방분권 자율화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동향 및 대응방안

제 21대 국회에 발의(7.3)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지속 추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정부안)' 주요내용

- **지자체 조직권** : 부단체장 증원(3명 → 5명), 실국본부(18개 → 21개)
 - 부단체장과 실·국·본부 수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 **주민참여 확대** : '주민자치회' 명문화, 주민감사청구 완화(500명→300명)
 -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도입 근거 마련
- **협력관계 확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도모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 ※ 후속 법률(중앙·지방 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법률안) 국회 발의(7.3)
- **시의회 권한확대**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문위원 수 확대(+1명),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마련(대통령령 위임) 등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2인당 1명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적용 검토

□ 추진 실적

- 지방 4대 협의체 연대 입법 촉구 및 개별 국회의원 방문·설명 : '20.2월 ~
- 자치분권위원장, 시장권한대행 지방분권관련 입법 협력 합의 : '20.8.24.
- 자치분권위 주관, 자치분권 주요법안 관련 시·도 영상회의 : '20.8.25.

□ 향후 대응계획

-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지속적 의견제출**
 - 시의회(지방분권 TF), 시도지사협의회, 지방4대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 국회 행안위 소속 개별 국회의원 방문·설명(계속)
- 9월 정기국회 대비, **입법동향 지속 모니터링**
 - 부단체장 증원,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등 주요입법과제 심의진행 모니터링
- 법안 통과시, 시의회와 협의하여 자치법규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 의회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등 시행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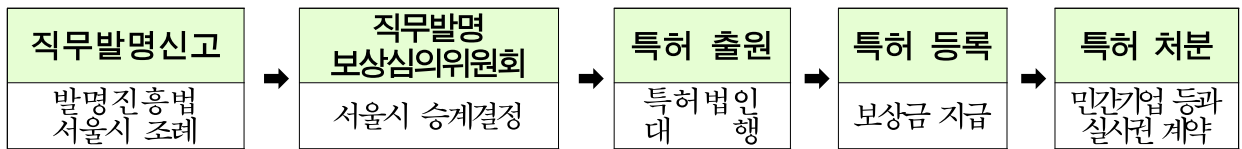
5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개선

우리시 직무발명 공무원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시 보유 지식재산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개선방안 마련

□ 사업 개요

- **근 거** : 발명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 **대 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발명
- **절 차** : 직무발명 승계 여부 심의 후 특허 등록 및 보상



○ 보상내용

- 등록보상금 :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
- 처분보상금 : 특허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100분의 50

□ 추진 실적

-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 및 특허 권리 15건 승계 : '20.5월
- 시유 특허 9건 증가에 따른 등록보상금 900만원 지급 : ~'20.8월
- 지식재산권 실시 계약 14건 체결 및 실시료 1,836만원 징수: ~'20.8월

□ 추진 계획

○ 조례 개정을 통한 등록보상금 지급 규모 상향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각 200/100/60만원으로 기존 대비 100% 인상

※ 기타 인사상 특전은 금전적 보상과의 중복, 타 직렬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별도 신설 없이 법령상 '우수제안자' '행정의 달인'등에게 부여되는 특전을 활용토록 권고

○ 대내·외 홍보 및 교류·협력 강화

- 지식재산권 처분 공고 확대, 직원대상 설명회 개최, 발명진흥회 연계 사업 추진 등

□ 향후 일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 개정안 상정 : '20.12월
- 홍보 및 교류·협력 강화 관련 사업 추진 : '21.1월~

6

체계적 정부합동평가 대비로 시민만족도 제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 '20년 결과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하여 '21년 평가에 대비

□ 개 요

- **근 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평가대상**: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무, 국가주요시책
- **평가지기**: 매년 1~ 6월(실적기준: 전년도 1~12월)
- **평가분야**: 5대 국정목표 122개 지표 * 서울시 해당지표: 115개(정성 34, 정량 81)
- **평가방법**: [정성] 우수사례, [정량] 목표달성도 구분, 시부·도부 별도 평가
- **소요예산**: 991,000천원 * 예산사업명 :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관리)

□ '20년 평가결과

- (정성) 시부 우수사례 35개 중 **서울 11개 선정** ※ 우수 시 선정
 - 시도 지방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우수사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우수사례 등
- (정량) 달성도 69% : 81개 지표중 56개 달성, 25개 미달성
 - * '18년까지 가나다등급 부여, '19년부터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여 시도별 목표 달성여부만 평가

□ 중점 추진내용

- (정성) 우수사례 미선정 지표*에 대해 행안부 **컨설팅 의뢰하여 개선 방안 마련**
 - * 미선정 지표 :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사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 (정량) 대도시 특성상 **현실적으로 목표달성 곤란한 지표 개선 추진**
 -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의 경우 병원 폐업률이 높은 대도시는 추적조사가 어려운 등 불리
- 정량지표 분기별 실적점검, 정성지표 우수사례 조기 발굴 등 선제적 관리

□ 향후 일정

- '21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시·구 지표담당자 워크숍 : '20.10월
- 불합리한 지표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지속요구(→정부) : 수 시
- 시·구 우수기관·유공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20.11월
- 정부합동평가 대상 사업 효율화를 위한 온라인 정기 토론회 개최 : 격 월

7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의 핵심원칙으로 설정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전반에 확산되도록 도모함

□ 추진 배경

- UN, 지속가능발전 담론 발표('15.9월)를 통해 전 세계에 이행수단 마련 촉구
- 경제·사회·환경의 미래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市の 새로운 발전모델 정립 필요
 - ※ 지속가능발전 :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 그간 추진성과

- 제1차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기본계획: '15~'19년 / 이행계획: '17~'19년)
 - 4대 목표, 15대 전략, 35개 과제, 328개 세부사업, 405개 성과지표 설정·관리
- 경제·사회·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13년~)
- 시민참여형 대토론회 개최 등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16년~)

□ 향후 추진계획

〈 제2차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계획기간: '20~'24년 / '20.9월 중 수립예정) 〉

-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17대 목표 및 96개 세부과제 도출
 - 제1차 계획과의 차이 : 유사사업 통합(328개→108개) 등을 통해 관리의 용이성 제고
 - ※ 제1차 계획의 경우 세부사업 간 중복 및 세부사업 수 과다로 인해 관리에 애로 발생
-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취약지표를 대상으로 역점 개선과제 마련
 - ※ 취약지표 : (경제) 사회적경제 기업 수 / (사회) 평생교육 참여율 / (환경) 신재생에너지 비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시민참여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사회 공유〉

-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제2차 기본계획 본격 시행
 - ※ (임기) '20.2월~'22.2월 / (위원수) 36명 / (기능)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심의 등
- 온라인 시민토론회 개최('20.11월)를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 발표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①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제도개선 추진

②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

③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④ 공익변호사단 활동으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1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제도개선 추진

코로나19 대응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추진

□ 추진 방향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법령·제도상 미비점 정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과제 중점 발굴
- 자치법규(조례·규칙)상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사항 정비

□ 중점 추진내용

① 감염병 적시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추진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 실무부서 의견조회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 및 정부·국회 건의('20. 5~6월)
 - 우리시 건의내용을 일부 포함한 감염병예방법 공포 및 시행('20. 8. 12.)

《 감염병예방법 주요 개정내용('20. 8. 12.) 》

구 분	내 용
지역사회 전파 사전차단 (우리시 건의내용 포함)	■ 감염 위험 장소·시설 관리자,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방역시설 대응력 제고	■ 감염병 환자 등을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고, 전원 등 조치 거부시 치료비 부담 및 과태료 부과 ■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 동원

- 김원이 의원 발의안(우리시 개정안 반영) 등 국회 계류 중 안건(총 37건)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 및 협의 지속
-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혁신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건의**
 - (행안부) 지역개발, 도시재생 등 규제개혁과제 65건 건의, 25건 선정('20. 상반기)
 - (국 회) 코로나19 대응, 도시정비 등 법령제도개선 중점과제 발굴·건의('20. 9월)

② 자치법규 불합리 등록규제 일제정비

- 정비대상 : 市 조례·규칙 등록규제 129건
 - 등록규제 총 412건 중 '10년 이전에 등록된 129건 우선 정비
 - ※ 등록규제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市에서 등록·관리하는 조례·규칙상 규제
 - 규제입증 책임제에 따라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 규제유지 필요성 입증
- | | | | | | | |
|--------------------|---|-------------------|---|-----------------------|---|--|
| 정비대상 통보
(법무담당관) | ➔ | 검토의견 제출
(소관부서) | ➔ | 규제 존치여부 검토
(법무담당관) | ➔ | 최종 규제심사
(市규제개혁위원회)
<small>※ 검토의견 불일치 시</small> |
|--------------------|---|-------------------|---|-----------------------|---|--|
- 정비대상 등록규제 존치여부 소관부서 및 법무담당관 검토 실시('20. 상반기)
 - 정비결과 : 등록규제 제외 25건, 규제존치 102건, 최종 규제심사 대상 2건
 - ※ 등록규제 제외 : 행정안전부 업무지침 변경 등으로 현재에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 등록규제 정비결과 보고 및 규제심사 대상 2건 심의('20. 9월 규제위 개최)

③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
 - 공모기간 : 2020. 9. 1.(화) ~ 9. 25.(금)(4주간)
 - 공모대상 : 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민생경제, 혁신성장 등 5개 분야
 - 동주민센터 포스터 부착, 전광판 표출, 시·구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 진행

2019년 수상작 주요 개선사례

- '19년도 최우수상 :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전동킥보드 규제 개혁
 - 도로교통법 개정 시 반영('20. 12. 10. 시행)
 - 개정내용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교통체계에 적절하게 편입
- 시민과 기업의 규제입증 요청을 위해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개편
 - 시민·기업이 직접 규제의 존치여부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市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 내 별도 창구 마련('20. 9월)

□ 향후 일정

-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및 심사 : '20. 9~11월
- 법령·제도개선 제안집(「바꾸어요, 희망으로」) 제작·배포 : '20. 10~12월

2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

□ 사업 개요

- 사업명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20년도 예산: 294백만원)
- 심판위원 : 정원 50명/현원 42명(외부 37명, 내부 5명)
- 회의운영 : 연간 24회 개최(매월 2회) ※ '20년 : 총 27회 개최 예정

□ 중점 추진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행정심판사건 집중처리(6~8월) 성공적 실시
 - 시민생활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처리건수 확대를 통한 재결기간 단축 노력
 - 집중처리 기간 중 민생사건 포함 총 617건 처리

건수 \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처리건수	128건	133건	154건	171건	177건	210건	220건	187건
기간별 월 평균	152.6건					205.7건		

※ 직전기간(20. 1~5월) 대비 월 평균 처리건수 53.1건 증가

- 집중처리 기간 중 행정심판위원회 증회 운영(총 9회 실시, 월 2회 → 3회)
 - 행정심판사건의 신속 상정을 위해 매월 수시 1회 추가 개최
- 신속한 처리와 함께, 심도 있는 심리를 위한 주·부심제 적극 활용
 - 주·부심 지정현황(회당): 18.8건('18) → 21.9건('19) → 24.4건('20.6~8월)

□ 향후 일정

- 시민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행정심판 재결레집 제작·배포 : '20.11월
 - 분야별 재결레 선정(9월), 개인정보 삭제 등 보안작업(10월), 책자 제작·배포(11월)

3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소송업무의 차질없는 수행 및 송무지원 강화를 통하여 전문적·체계적 소송수행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추진 방향

○ 법률전문관(변호사)의 소송 대응으로 전문성 강화

- 서울시 소속 변호사(9명)가 소송을 직접수행하여 부서의 업무부담 경감
- 소장접수부터 판결선고까지 법률전문관이 소송을 전담하여 전문적인 대응 가능

○ 전문 소송수행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예산절감 추진

* 외부변호사 선임 강행규정이 있거나 법률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외부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제외

□ 추진 실적

○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 '20년 총 837건 수행

- 소송수행 현황

(단위: 건)

구 분	수 행 건 수			판 결 확 정					진 행
	계	이 월	신 소	계	승 소	승소율(%)	패 소	기타	
2020.7월	837	559	278	237	156	73.6	56	25	600

* 승소는 소취하·화해·조정 등을 포함하며, 소가(訴價) 기준 50% 이상의 일부 승소를 포함

* 기타는 답변서 제출 전 소취하, 기타 조정·이송 등

○ 시정에 영향이 큰 중요소송 승소를 통한 예산절감

-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사건(소가 141억 중 10억 인용, 92.8% 일부승소) 승소
- 양재역 환승주차장 인도청구 사건(소가 34억 전부승소) 승소

○ 소송 직접수행으로 예산절감: 신소 201건 직접수행

□ 향후 일정

○ 송무업무(통합부서 소송 직접 수행, 비통합부서 소송 지원): 연중 상시 수행

4 공익변호사단 활동으로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공익변호사 사업의 지속적 홍보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법률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추진 방향

- 편리하게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 모든 시민에게 상시 제공되는 법률서비스로,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유도

□ 공익변호사단 운영 실적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1,147명)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20. 7월말 기준)

구 분	시민법률상담실	마을변호사	이웃분쟁조정센터
목 적	전문 법조인의 대시민 법률상담서비스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제공		이웃 간의 갈등을 시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1층	25개 자치구 모든 동주민센터 424곳	서소문청사 1동 1층
운영방법	4명의 변호사가 방문하여 상담(매일)	동별 상담일에 변호사 방문상담(매월1~4회)	조정전문가가 참여하여 이웃 간 갈등 해소(수시)
활동인원	공익변호사 전원 (매월 공익변호사가 신청)	공익변호사 중 848명	공익변호사 중 16명
상담실적	2,520건 (월평균 360건)	8,385건 (월평균 1,197건)	72건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률서비스 제공방식 다양화
 - 방역절차 준수하여 대면 또는 전화로 상담방식 변경
- 마을변호사 상담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시·구 영상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 및 마을버스 등 오프라인 홍보

□ 향후 일정

- 임기만료 공익변호사 재위촉 : ’20. 12월
 - 서울지방변호사회 협조를 통한 징계사실 조회 등
- 마을변호사 수시배정 등 마을변호사 활동 강화 : 연중 상시

3.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① 시정 성인지적 관점 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제 운영

② 투자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관리

③ 실질적 2단계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 대응

④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

⑥ '20년('19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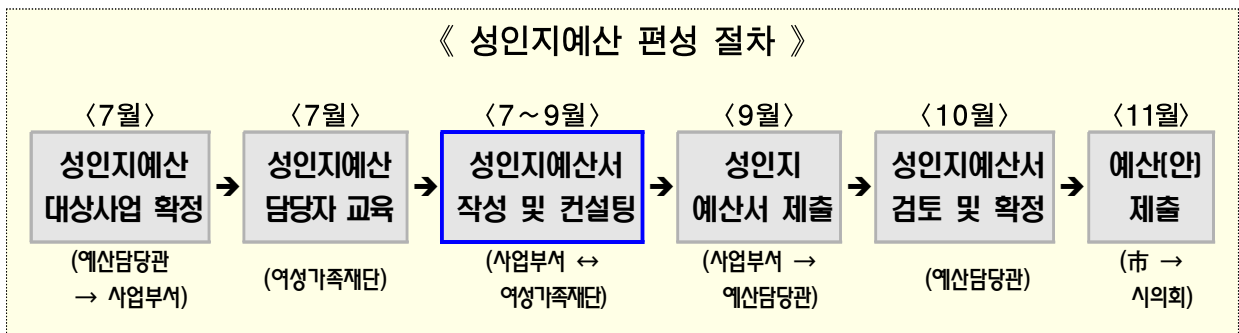
⑦ 市 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의무화 및 선정절차 마련

1 시정 성인지적 관점 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제 운영

성인지예산의 실질적 성평등 제고효과를 확대하고 실무자의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 추진 방향

- 성인지예산의 **실질적 성평등 제고효과**에 대한 **분석체계 구축**
- **실무 담당자의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확대 추진**
- **사업부서 의견 적극 반영**한 대상사업 선정으로 **실효성 제고**



□ 추진 실적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분석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7월)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11개, 성별영향평가사업 51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23개 등 **85개 신규사업 선정**하고,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TF, 전문가 자문회의 등 **성평등 제고효과 분석**하여 59개 사업 제외하는 등 **사업 재구조화 추진**
 - '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총 359개 선정**('2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사업 333개)
 - ※ 추후 '21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대상사업 수는 변동 가능
- **실무 담당자 대상 교육 및 상담 실시**(7월)
 - 실무 담당자 대상으로 **성인지예산 편성 관련 교육**(7.7, 7.9) 실시
 - 실무 담당자의 성인지 역량 강화 위해 성인지예산 컨설턴트와 **면대면 상담 추진**
 - 사례중심의 서울형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배부**

□ 추진 계획

○ 성인지예산 편성 **전문 컨설팅 실시**(8~10월)

- 추진 방법 : 서면컨설팅 2~3회(유선컨설팅 수시 병행)
- 컨설팅내용 :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지표 설정 등 작성기준 자문 및 사업별 구체적인 컨설팅 제공

〈분야별 컨설팅단 개요〉

- ◎ 구성 : 이화리더십개발원 여성학 전문가,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등 9명
- ◎ 분야 :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건축·안전, 보육·여성, 문화·교육

○ 성평등 체감도 강화 위한 **성인지예산서 수정·보완**(9~10월)

- 사업부서 : 실제 사업대상을 감안한 성별 사업수혜자 조정, 사업환경을 고려한 성평등 기대효과 작성 등 성인지예산서 수정·보완
- 예산담당관 : 재원별·성별 소요예산 검토,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검토, 성과목표 산출근거 확인 등 성인지예산서 검증

○ '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10월)

- 컨설팅을 통해 수정·보완된 성인지예산서에 대해 심의하고 최종 확정

□ 향후 일정

- 성인지예산서 의회 제출(예산담당관) : '20. 11. 2.
- 서울시 성인지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여성가족재단) : '20. 4.~12.
※ 성인지예·결산 성과목표 관리체계 개발(여성가족재단) '21년 진행 예정

《 서울시 성인지예·결산서 종합분석 개요 》

- ◎ 추진방향 :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추진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 운영 개선안 도출
- ◎ 추진내용
 - 서울시 성인지예산제 운영체계 및 성인지예·결산 추진현황 분석
 - 서울시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적절성, 예산서 작성 효용성 분석
 - 담당 공무원, 전문가 면접조사 실시
- ◎ 기대효과 : 성인지예산서의 안정적 운영 및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내실화

2

투자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관리

공공임대주택 확충, 도시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기 재원조달로 시정 핵심사업 성과 제고

□ 발행 개요

○ 발행대상

-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재해예방, 복구사업 및 지방채 차환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합의 보전

○ 발행규모 : 3조 6,164억원 ('19년 이월 3,187억원 포함)

- 임대주택 공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51개 사업 ※ 8월기준 1조 8,817억원발행

○ 발행절차 : 온라인으로 발행 제안서 공고 후 금리 등 고려하여 투자자 선정

□ 발행 계획

○ (발행시기) 사업공정률 및 자금 소요시기, 채권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 시기 조정

- 시 자금 수급 전망, 금리 추이 및 국고채 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시기 발행

○ (차 입 선) 발행금리 및 상환계획 등을 고려하여 모집공채, 금융채, 정부자금 등 발행조건이 유리한 차입선으로 결정

- 대부분 사업(48개 사업)에 대해 현재 금융채보다 금리가 낮은 모집공채로 발행하고 2개 사업은 정부자금 용자, 1개 사업은 매출공채(도철공채)

※ 금리(8.10 기준) : 모집공채 1.244%(5년물) / 금융채 2.02%

○ (발행구간) 3년물/5년물(단기), 7년물/10년물(중장기) 등으로 구성

-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 만기구조 분산
-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고채 주요 발행구간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

□ 향후 일정

- 사업공정률·자금 소요시기 등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 ~'20.12월
- 상환계획 관리 및 채무현황 상시 모니터링 실시 : ~'20.12월

3 실질적 2단계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 대응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 재정 확충 및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관계 재정립

□ 추진 방향

- 2단계 재정분권의 실효적 추진을 통해 지방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재정조정으로 우리시 실질적 재정 확충
- 재정분권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시의회·국회, 학계 등과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추진동력 확보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자치분권위원회)

〈 기본 방향 〉

- (세수확충) 기능이양과 연계하여 지방세수 확충 규모를 설정
- (기능이양) 주요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지방 재정과 기능의 합리적 배분
- (재정조정) 지역 간 세원불균형 방지를 위한 보정장치 마련

$$\begin{array}{l} \rightarrow \text{▶ 지방재정 순증} = \text{지방세 확충} + \text{기초연금 국가이양} - \text{국고보조 지방이양} \\ \quad \quad \quad (3.4\text{조}) \quad \quad \quad (8.8\text{조}) \quad \quad \quad (3.2\text{조}) \quad \quad \quad (8.6\text{조}) \end{array}$$

-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및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지방이양을 통해 총 8.8조원 확충
 - 부가가치세의 21%인 '지방소비세율'을 31%로 인상(8.5조원), 국세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를 레저세(0.3조원)로 전환

- (기능이양) 지역밀착형 사업은 지방이양, 전국적·보편적 성격의 사업은 중앙이양하여 **중앙-지방 기능의 합리적 배분**
 - 기초연금사업은 국가로 이양(3.2조원),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등을 포함한 일부 국고보조사업(8.6조원)은 지방으로 이양 ⇒ 5.4조 지방재정부담
- (재정조정) 지방소비세 확충액(8.5조원) 중 일부(5.4조원)를 **지자체 기능이양에 따른 부담분(5.4조원)으로 총당 후 잔여액 3.1조원을 지역발전상생기금에 산입하여 시·도간 배분**

□ 추진 계획

- 우리시 재정상황을 고려, 타 지자체와 협력·상생할 수 있는 **재정조정방안 건의**
 - 정부의 기능이양에 따른 재정부담(5.4조)의 한시적 보전 및 現 지방소비세의 시·도별 배분비중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배분(3.1조)
-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촉구를 위해 **시의회·국회,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동대응**
 - 연내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방문, 재정분권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명 지속
- 재정 관련 학계 및 전문가 등과 협력, **재정분권 효과 언론홍보 추진**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지방재정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 효과 등 중점 부각

□ 향후 일정

- 기능이양 및 재정조정방안에 대한 시도협·국회 건의 : '20.9월~
- 2단계 재정분권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언론홍보 추진 : '20.9월~

4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주요 사업의 투자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운용 및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전문성 확보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 도모

□ 추진 방향

- 주요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투자심사 제도개선
- 투자심사위원회(정기·수시) 상설 운영으로 주요사업 신속 추진 지원

□ 심사 개요

- 심사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자원조달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분석
- 심사방법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15명 내외 심의(외부 12, 내부 3)
- 심사결과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추진 실적

- (제도개선)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및 지침 개정: 2020. 7.
 - 타당성 검증 대상 범위 완화(40억원이상 → 300억원~500억원 미만) 등
- (제도개선) 市 투자심사 횟수 확대 및 기간단축을 통해 주요사업 신속추진 지원
 - 정기 심사(총 3회, 3,5,7월) 외 수시 투자심사 확대 운영 (총 4회 2,4,5,6월)
- (위원회 운영) 市 투자심사 : 총 146건, 총사업비 141,669억원(총 7회 실시)
 - (심사결과) 적정 25건(17%), 조건부추진 64건(44%), 재검토 9건(6%), 반려 및 철회 48건(33%)
- (심사지원) 중앙투자심사 : 총 15건, 총사업비 6,030억원(총 2회 실시)
 - (심사결과) 조건부추진 10건(67%), 재검토 5건(33%)

□ 향후 일정

- 하반기 정기 및 수시 市 투자심사 실시 (총 2회, 9,10월)

5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대응상황 보고

□ 추진 배경

- 투자·출연기관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 시행 필요
- 확진자 발생 시에도 대시민 필수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관별로 비상조직 운영 및 사전 대응계획 수립 필요

□ 대응 상황 (※ '20. 8월 말 기준)

- (필수기능 유지) 비상조직구성·대체인력배치 통해 유사상황 대비 철저
 - 기관별로 '비상상황반'을 운영하여 확진자 발생 시 전 직원 상황 신속전파, 접촉자 격리 및 코로나 검사실시, 시설물 폐쇄 등 필요조치 즉각 시행
 - 확진자 발생 시, 대체인력·대직자·재택근무자 등 투입가능 인력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침수립 안내
 - 필수기능 예시 : 지하철 운영,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안전 유지관리, 발전소관리, 의료시스템 운영, 코로나 콜센터 상담, 방송, 필수 행정업무 등
- (방역조치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중앙사고수습본부 최신지침을 각 기관에 전파하여 방역활동 철저 독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모임 집합금지
 -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방역조치 시행 및 접촉자 코로나검사 실시 후 격리조치
- (복무지침 강화) 재택근무 확대·고위험시설 방문금지 등 복무기강 확립 안내
 -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명령 대상시설 및 고위험시설 방문·이용 자제
 - 재택근무 시행, 외부인 대인접촉 최소화 권고,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착용 안내

➡ 추후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적합지침 수립·전파 지속시행

6

'20년('19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투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경영 합리화 및 시민 복리 증진 도모

□ 투자기관 평가개요

①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경영목표의 달성도 등에 대한 법정평가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직영기업 249개(공사공단 150, 직영기업 99)
 - 서울시 :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 ※ 지방공기업을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시설공단 등 8개 유형으로 구분 평가
- 평가방법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 (행정안전부 주관)
- 평가시기 : '20. 4월~9월
- 평가지표 : 공통지표(70), 공기업별 특성지표(30)
 - 공통지표(70) : 리더십, 경영시스템, 고객만족성과,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 공기업별 특성지표(30) : 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 결과활용 : 평가등급(가~마) 부여 및 평가급 지급률 범위 결정
 - 기관장(0~400%), 임원(0~300%), 직원(0~200%, 자체평가급 100% 별도)

② 서울시 핵심가치평가

시정철학 구현노력 등에 대한 市 자율평가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 평가대상 :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 평가방법 : 서울시 직접 수행 ※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시기 : '20. 4월~10월
- 평가지표 : 운영성과(30), 재무성과(20), 사업성과(50)
- 결과활용 : 기관장·임원 평가 반영 및 직원 평가급 지급률 최종 결정
 - 기관장 평가(70%), 본부장 평가(40%), 감사 평가(20%)에 반영
 - 행정안전부 평가급 지급률 범위 내에서 최종 직원 평가급 지급률 결정

□ 출연기관 평가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평가대상** : 18개 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신보, 세종, 여성가족, 복지, 문화, 시향, 디자인, 장학, 평생교육, 50플러스, 디지털, 120, 공공보건, 기술연구원, 관광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 설립 1년 미만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 **평가방법** : 서울시 직접 수행 ※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지표** : '20. 4월~10월
- **평가지표** : 리더십·전략(15), 경영시스템(13), 사회적책임(22), 사업성과(50)
 - 리더십·전략(15) : 기관장 리더십(6), 전략기획(3), 정책준수(6)
 - 경영시스템(13) : 조직관리(2), 인사관리(4), 재무예산관리(7)
 - 사회적책임(22) :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6), 윤리경영(7), 사회적 공헌활동(2), 재난·안전관리(3), 이해관계자 참여(4)
- **결과활용** : 기관장 평가 반영 및 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
 - 기관장 평가 반영 : 경영평가(75%), 사업성과(15%), 직원만족도(10%)
 - 직원 성과급 지급률 : 평가등급(가~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0~300%) 결정,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률에 따른 지급총액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에게 차등 지급

□ 향후 일정

-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20. 9월 말
- 기관별 평가결과 확정·통보 : '20. 10월
 - ※ 행정안전부 주관 투자기관 경영평가는 '20. 9월 중 결과 확정·통보 예정
- 최종 평가결과 제298회 정례회 보고 : '20. 11월

7 市 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의무화 및 선정절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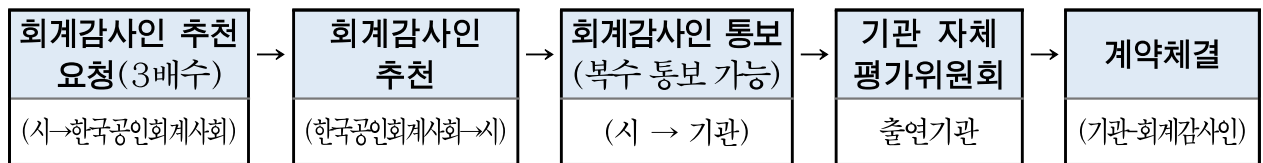
市 출연기관 회계감사 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¹⁾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추진 배경

- 출연기관 결산시 회계감사인 회계감사 규정 신설(출자출연법 제19조)
 - － 매년 2월 결산완료 후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 제출
- 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선정의 공정성과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
 - － 기관별 자체 선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회계감사인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중점 추진내용

- 대상 기관 : 市 출연기관 등 21개 기관(자원봉사센터 포함)
 - 개선 내용 : 시 지침으로 회계감사인 지정 의무화 및 선정절차 객관성 확보
 - 회계감사인 선정 (※ 2020년 결산부터 적용)
 - － (市 소관부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 추천
 - － (출연기관) 시에서 지정한 회계감사인 중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 및 계약
- ※ 선정절차



▶ 회계감사인 지정 후 계약기간 내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동일한 절차 적용

□ 향후 일정

- 회계감사인 추천요청 및 추천(市소관부서, 한국공인회계사회) : '20. 8월
- 회계감사인 지정 및 추천내역 통보(市소관부서) : '20. 9월
- 회계감사인 선정 및 계약 체결(출연기관) : '20. 9월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을 말함

4.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

① 지자체 협력을 통한 코로나 등 대응력 강화

② 서울-지역간 우호교류 협력 체계 강화

③ 서울-지방간 정책교류를 위한 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④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및 운영

⑤ 민간 비영리단체를 통한 아시아 개도국도시 공적개발원조 추진

⑥ 도시 간 교류협력 다양화를 통한 市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⑦ 서울시 우수정책 연계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⑧ 국제기구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⑨ 서울-관아킬시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웨비나 개최

1

지자체 협력을 통한 코로나 등 대응력 강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지방분권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적시 대응 및 효율적 추진 도모

추진 방향

- 지자체간 공조 체계 구축으로 코로나 등 위기 발생시 신속·효율적 대응 도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 실현

중점 추진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초광역적 대응 및 공동방역체계 구축
 - 우리시 제안으로 개최한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확산(2월)
 -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도권 방역 공조 체계 구축 및 캠페인 등 진행(3.3.~)
 - 코로나 안심구역 '클린존' 운영 등 우리시 우수 방역 사례 지자체간 공유
- 코로나, 수해 등 재난재해 발생 지역의 인도적 지원으로 상생 가치 실현
 - 우한교민 격리시설 운영한 아산·진천·음성(2.5억원)과 대구·경북 지원(4억원)
 -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충청·광주·전라 7개 지자체 이재민 지원(6억원)
 - 피해 지역 11번가 농·수산물 기획전 등으로 지역 농·수산물 판로 지원(1,245백만원 매출)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자체간 다각적 협력 방안 모색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지방 4대협의체 공동촉구문 발표(2월)
 - 우리시(안)을 기반으로 시·도 합의(안)을 반영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률안 발의(7.3.)
 - 지역 공동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도협 성명 발표(8월)

향후 계획

- 코로나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시·도간 공동 대응 : 상시

2

서울-지역간 우호교류 협력 체계 강화

서울시민과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교류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지역 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기반 조성 및 강화

□ 추진 방향

-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 상생협력 관계 공고화 및 사업 내실화 추진
-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한 협약사업 준비를 통해 교류의 지속가능성 제고

□ 중점 추진내용

- 교류 효율성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역 맞춤형 우호교류협약 체결

《 2020년 우호교류협약 체결 현황 》

- 계룡시(5.11) :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협력,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우수정책 교류 등 5개 사업
- 제주시(5.19) : 문화예술공연 교류 확대, 4·3의 전국화, 공연시설 사용 협조 등 5개 사업
- 김해시(5.22) : 복지분야 민·관 상호협력, 농산물 판매지원 등 5개 사업

※ 서울-타 지자체 MOU 체결현황('20.8월 기준) : 총 67건(광역 13, 기초 54)

-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우호교류협약 개선방안 수립 시행
 - 우호교류협력 협약갱신제 실시 통보(64개 지자체)

□ 향후 계획

- 실행가능한 교류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지역간 상생협약관계 지속 유지
 - 협약갱신제(4년 주기) 시행을 통한 기존 협력사업의 고도화 및 신규사업 발굴
 - 협약체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사업 추가 발굴 및 교류지원
- 기존 교류협력사업의 분석을 통한 서울형 상생협력모델 개발
 - MOU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상생협력사업의 실행가능성 제고
 -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민관협력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교류 효과성 향상

3

서울-지방간 정책교류를 위한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우리시 혁신정책을 타 광역·기초 지자체와 공유 및 정책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돕고 서울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기여

□ 추진 방향

- 단순 현장방문이 아닌 실질적 논의와 학습운영을 통해 서울정책 이해도 증진
- 지역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 컨설팅으로 지방정책 추진의 실행력 제고

□ 중점 추진내용

- 서울-지역간 정책공유 플랫폼 「서울혁신로드」 (지방→서울) 운영: 10개팀, 204명
 - 코로나-19 확산 방지 운영지침 수립 및 온·오프라인 연수 시행
 - 연수 참가자 DB를 활용한 우리시 주요정책 홍보 실시(뉴스레터 총11회 발송)
- 지역 정책현장 컨설팅 「찾아가는 혁신로드」 (서울→지방) 운영 : 3개 지자체
 - 괴산군(도시재생 분야), 경남(청년 분야), 남해군(청년 분야) 대상 지역현장 컨설팅

□ 향후 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서울 혁신로드」 운영 내실화
 - 비대면 정책연수 진행, 온라인 콘텐츠 확대 등을 통한 상시 운영체계 마련
 - 지역수요 반영 및 방문지 편중문제 해결을 위해 장소 다각화 및 신규방문지 개발
- 「찾아가는 혁신로드」 요청 지자체 정책컨설팅 : 2개 지자체(전남 광양시, 부산 영도구)
 - 참여 지자체 사전 수요조사(4월) 결과에 기초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
 - ※ 전남 광양시(관광 활성화), 부산 영도구(청년정책)
 - 심도 깊은 정책 분석·논의를 통해 정책 현안 해결방안 모색 및 대안 제시

4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및 운영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우리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운영 근거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958년부터 ~ 현재 ※ 누적수여자 현황('20.8월말) : 총 99개국 858명
- 수여대상
 - 우리시에 계속 3년(또는 누적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수여 가능
 -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 후보자 추천 :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
- 수여절차

명예시민 추천공모
(6.8.~7.17.)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7.29.)

⇒ 시의회 동의
(9월중)

⇒ '명예시민의 날' 수여식
(11.5.)

- 관리 및 활용방안 : 서울시정 참여 기회 확대, 정기적 시정소식 제공 등
 -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등 시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市 주최·주관 국제행사 참여 등 명예시민으로서의 적극적 역할 부여로 시정참여 기회 확대

□ 추진 내용

- 추천 공모('20.6.8. ~ 7.17, 6주간) : 29개국 37명 접수
-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20.7.29.) : 17개국 19명 선정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동의안 제출('20.9월)



〈 2019 명예시민의 날 〉

□ 향후 일정

- 2020 명예시민의 날 개최(11.5) : 수여식 중심 행사규모 최소화(코로나 상황 반영 추진)
 -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

5

민간 비영리단체를 통한 아시아 개도국도시 공적개발원조 추진

市 관내 민간 비영리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개도국도시 지원사업으로 해외도시와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우리시의 국제적 이미지 향상

□ 추진 방향

- 市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교류 분야에서 시와 민간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 개도국 취약계층 지원으로 해외도시 우호관계 구축 및 우리시 국제적 이미지 제고

□ '20년 사업 개요

- 사업명 :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 소요예산 : 총 195백만원
- 지원분야 : 아시아지역 「아동 교육환경」 및 「취약계층 보건위생」
- 선정기준 : 해외 국제개발 지원사업 수행실적, 코로나19 안전 확보 준비성 등
- 선정결과 : 공모를 통한 8개 단체 선정(교육 3, 보건 5)
 - 교육분야 :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피해지역의 초등학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 보건분야 : 취약계층 밀집 지역 코로나19 의료 물품 긴급 지원 등 5개 사업
- 기대효과 : 인도적 지원을 통해 해외도시와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市 정책 수출 및 관련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 '19년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성과 〉

- ▶ 선정사업 : 유엔 아동권리협약 30주년 기념하여 「아동 지원사업」 9개 실시
 - 인도 한센인마을 아동 보건위생지원, 베트남 취약계층 아동 컴퓨터 교육 등
- ▶ 소요비용 : 총 233백만원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 ▶ 사업성과 : 아시아 개도국 아동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 컴퓨터 교육, 의료지원 등 민간 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으로 市 위상강화 및 해외도시와 우호관계 구축

□ 향후 일정

- 사업별 중간 평가 실시 및 2차 보조금 교부 : 2020. 9.
- 사업별 회계감사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2020. 12.

6 도시 간 교류협력 다양화를 통한 市 글로벌 리더십 강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속에 모범적으로 평가받는 市 방역정책을 해외 도시와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도시외교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추진 방향

- 우리시 코로나19 우수 방역정책 사례를 해외 도시들에게 적극 홍보
- 전염병 공동대응 위한 시장회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글로벌 리더십 발휘
-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언택트 방식의 새로운 도시외교 지속 추진

□ 추진 내용

① 비대면(언택트) 방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체와 교류협력 강화

- 도시, 중앙정부, 대학 등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교류협력 대상 다양화**
 - 아테네, 이스탄불 등 도시정부와 통화, 독일 연방총리실, 콜롬비아 부통령 등과 화상회의
 - C40 회원도시, 美 Plug&Play CEO, 스탠포드大 장학생 등과 다자간 화상회의 참여
- 국제기구 회원도시 대상으로 **市 방역정책 공유 및 도시간 대응책 논의**
 - 국제기구(CityNet, WeGo, GSEF, Metropolis)를 통해 市 방역정책 노하우 홍보
 - UNDP, UNDRR 등 UN기구에 코로나19 방역 역학조사 방법 등 우수정책 공유

②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도시 간 교류 활성화 주도**

-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CAC 도시정부 시장회의 개최**
 - 도시별 코로나19 대응사례·토론을 통한 도시별 경험 공유, 협력방안 논의
 - 감염병 발생시 선제적 공동대응 위한 도시간협의체 설립제안 등

< CAC 도시정부 시장회의 >

- 일 시 : '20. 6. 2(화) 22:00 ~ 24:00
- 진행방식 : 무관중 화상회의(유튜브 생중계)
- 참석 : 42개 해외도시 (런던, 메릴랜드, 자카르타, 모스크바 시장 등)
※ '20.8.24.현재 유튜브 조회수 765만뷰

- **코로나19 도시 간 정책공유 플랫폼(Cities Against COVID-19) 운영**
 - 서울시 코로나 대응책 종합 정리자료(Fight against COVID-19)게재
 - 선별진료소, 드라이브 스루 등 혁신적인 방역정책 및 방역물품 정보 공유
 - 각 도시 주요정책 및 요청사항 게시, 질문 답변 등 도시간 쌍방향 소통창구로 활용
 - ※ 플랫폼 개설('20.4.9.)이후 현재까지 11백만 뷰 이상 기록 중

□ 추진 계획

① 해외도시·국제기구와 연대·협력을 통한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 **코로나 시대 도시간 국제교류 방안 모색을 위한 텔아비브시 영상회의**
 - '20.9.15.(화)/ 부다페스트, 칸, 충칭, 밀라노, 모스크바, 바르셀로나 등 18개 도시
 - 코로나19 새로운 환경에 맞는 도시교류 전략 및 방향 논의
- **코로나 대처, 투자유치 등 경제협력을 위한 애틀랜타시 Virtual Summit**
 - '20.9.23.(수)/ 애틀랜타, 암스테르담, 상파울로, 서울시 등 4개 도시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정책 전략 논의
-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U20 영상 시장회의**
 - '20.9.30.(수)~10.2.(금)/ U20 45개 회원도시 시장 등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그린뉴딜,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 등 논의
 - ※ 회의내용은 '20년 G20 회의(11월, 사우디 리야드시)에 도시 의제로 제출

② 해외도시와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한 도시 간 우호협력 강화

- **서울-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한 중국의 날(온라인) 행사 개최('20.10월~)**
 - 서울 페스티벌 사이트를 통하여 분야별 콘텐츠·영상을 활용한 상호 문화교류
 - 서울·중국의 날 소개, 문화콘텐츠(전통 희곡·무용, 수공예품 등), 관광명소 소개 등
- **홋카이도 우호도시 협정 10주년 기념 도서교류 추진('20.10월~)**
 - 지속적인 도시교류를 통해 미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
 - 시장·도지사 영상기념식, 양 도시 도서관에 상호 도서 기증(100여권) 및 전용코너 설치

□ 향후 일정

- 해외도시·국제기구와 영상회의 등을 통한 의제별 협력 지속 : 2020. 9월~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도시외교 전략수립 및 실행모델 마련 : 2020.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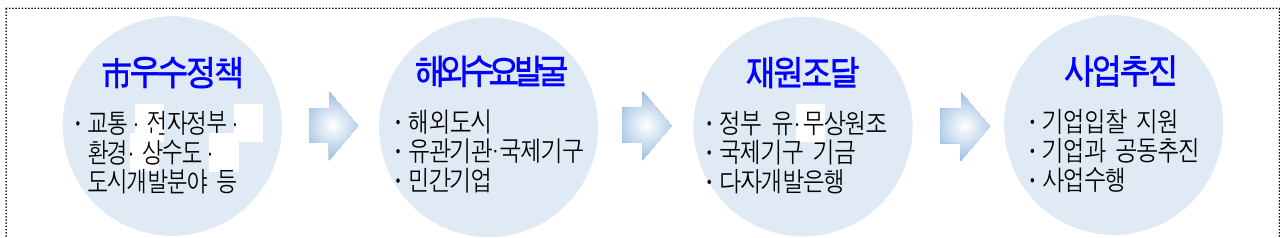
7

서울시 우수정책 연계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를 통해 민간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

□ 추진 방향

- 스마트 도시, 감염병 대응, 환경 등 글로벌 이슈와 해외 수요에 부합하는 서울 우수정책 콘텐츠 개발
- 市·유관기관·민간기업 전방위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시너지 창출
- 국내외 공적개발원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재원 유치



□ 추진 내용

- 민간기업과 해외수요 반영한 **수출 콘텐츠 발굴**로 해외사업 분야 **다변화**
 - **K-방역 서울형 표준 모델 개발** 및 방역기업 해외진출 지원
 - ▶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 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9월~12월)
 - ▶ 방역, 지원정책 등 종합적 방역정책 정리 및 해외도시 유형별 방역모델 개발
 - ※ 방역물품 기업 해외도시 매칭 상담회 및 서울방역정책 컨설팅 실시 예정('20, 11월)
 - **'폐기물' 분야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 해외 도시 폐기물 매립지 현황(규모, 매립량 등) 자료 분석(25국 35도시, 1~3월)
 - ▶ 폐기물 분야 발주 동향 및 수요, 정책 상품, 진출 전략 등 **수출 매뉴얼 제작**(4~9월)
 - ※ 인도네시아 팔렘방 등 2~3개 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시범사업 발굴 추진 ('21년)

○ **유관기관(KOTRA, KOICA 등), 민간기업(건화 등 22개) 협력을 통한 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추진 : 25건**

- 선정 사업 : 엘살바도르 광역교통체계 개선(1월) , 자카르타 대중교통 개선(3월) 등 8건
 - 신규 개발 : 페루 리마 스마트도시 , 탄자니아 도도마시 상수도시설개선 시범사업 등 9건
 - 입찰 참가 : 미얀마 철도역량강화, 스리랑카 콜롬보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8건
- ⇒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사업추진(자카르타 대중교통개선 등 선정사업 온라인 보고회·연수 실시, 중남미 등 신규사업 기획 현지기관과 수시 화상회의 개최, 현지 인력 활용 현지조사 실시 등)

○ **해외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우수 정책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공유**

- 우수정책 강의영상 콘텐츠 개발(방역, 교통, 스마트시티, 문화 4과목)
- 서울형 방역정책 공유, 화상회의 기능 추가 등 서울정책아카이브 플랫폼 기능 강화

○ **우수정책 진출 효과 증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민간기업,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포럼** 개최(7월, 11월)

※ K- 방역 민간기업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민관협력포럼 개최('20.7.2)

▶ 참가 :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코트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방역물품기업(씨젠, 그린 퓨어텍) / 온라인 생방송 방영(라이브서울 유튜브 * 누적조회 : 8.1천회)

○ **전략적 국제평가상 참여로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서울시 위상 제고**

- 「두바이 국제모범사례상」 수상 추진(2~4월, 서울로 7017 등 6건 / 11월 선정)
-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수상 추진(10월 신청/ '21년 선정)
- 2021년 「UN 공공행정상」 수상 추진(11월 신청/ '21년 6월 선정)

□ **향후 일정**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발굴·입찰참가·수행 : 연간
- 국제평가상 참여를 통한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 : 연간
-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포럼 개최 : '20년 11월
- 서울 방역정책 컨설팅 및 방역물품기업 해외도시 상담회 : '20년 11월
- 우수정책 강의 영상 콘텐츠 개발 : '20년 11월
- 코로나19 감염병대응 해외공유 모델 개발 : '20년 12월

8

국제기구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리더십 제고

□ 추진 방향

-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적 어젠다 대응 및 공동 문제 해결
- 해외도시와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강화

□ 중점 추진내용

-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및 시 우수 정책 전파**
 - 국제기구 주최 웨비나에 참석하여 시의 코로나19 대응 우수 정책 소개
 - ▶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4월), UNDP(유엔개발계획, 5월), 시티넷(5월)
 - 국제기구 뉴스레터, 메트로폴리스 온라인 플랫폼 등에 시 방역 정책 게재(3월)
- **시-국제기구간 협력 활동 다변화로 국제사회의 기여 범위 확대**
 - UCLG WORLD 집행부회의(5월), 메트로폴리스 임시 이사회(7월) 참석
 - 시티넷 회원도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웨비나(4회),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 등 지원
 - 메트로폴리스 시범사업에 참가함으로써 회원도시간 우수 정책 공유 추진
- 국제기구 지원 기반 확대를 위한 **전용공간 추가 확보 추진**
 - 기부채납시설(문배업무지구)을 활용한 제2글로벌센터 빌딩 조성 검토

□ 향후 일정

- 제2글로벌센터 빌딩 조성 : 연간 계속
- 메트로폴리스 시범사업 제안(보고타-마드리드-서울 공동) : '20년 9월
- 시티넷 집행위원회 참가 *온라인 : '20년 10월
- UCLG WORLD 이사회, 메트로폴리스 임시 총회 참가 *온라인 : '20년 11월
- 청년층을 위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 '20년 11월

9

서울-과야킬시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웨비나 개최

서울시-과야킬시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MOU 체결 및 정책공유 웨비나를 통해 중남미지역에 서울형 스마트시티 표준 모델 진출 및 민간기업 사업기반 조성

□ 추진 배경

- 코트라(중남미 본부 무역관) 서울시에 **스마트시티 정책 공유 요청 및 사업추진 제안**
- '서울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요가 높은 '중남미' 시장에 **기업 진출 교두보 마련**

□ 행사 개요

- 일 시 : '20. 10월초 08:00~09:40(과야킬 18:00~19:40) ※ 일정 협의중
- 장 소 : 서울시청 영상회의실, 과야킬시청
- 개최방법 : 비대면, 온라인 방식(서울시 공식유튜브 방송)
- 참 석 : 서울시·과야킬 등 도시정부 관계자, 코트라 무역관 관계자, 국내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 등 100 여명
- 주요내용 : 양도시간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MOU체결 및 정책 공유
 - 개회사(시장권한대행/과야킬시장), 축사(코트라 중남미본부장/IDB), MOU 체결
 - 정책발표(과야킬 스마트도시계획 및 현황, 서울 스마트 정책, 서울시 제언), 질의응답

< 에콰도르 과야킬 스마트시티 구축 >

- ✓ 목 적 : 에콰도르 최대도시 과야킬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통한 중남미지역에 서울형 스마트 도시 모델 확산과 관련 민간기업 진출 견인
- ✓ 기간/사업비 : '21. ~ / 미정
- ✓ 내 용 : 디지털 교육 보건·교통, 행정의사결정시스템 등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 ✓ 경 과 : 민관협력포럼('19.7), 현지 **코트라 사업 추진 협력 요청** 현지조사('19.9), 기재부 지식공유 사업(KSP, 5억) 신청, CAC써밋 참가 ※화상회의 : 5회(코트라, 과야킬시, 수출사업단, 서울시)
- ✓ 향후계획 : KSP 입찰('21. 3.), 국토부 글로벌협력사업·EDCF 차관 등 활용 사업 추진

□ 향후 일정

-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 및 웨비나 개최 : '20년 10월
- 기재부 KSP(지식공유사업) '21년 대상사업 선정 발표 : '20년 12월
- 국토부 K-CITY 글로벌협력사업(도사개발형/10억) 민간기업과 협력추진 : '21년 3월